

# 미·중 전략 경쟁 시대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 현상백**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장  
sbhyun@kiep.go.kr
- 문지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  
morganmoon@kiep.go.kr
- 박민숙**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mspark@kiep.go.kr
- 오종혁**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ojh@kiep.go.kr
- 오윤미**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ymoh@kiep.go.kr



##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 주요 내용

- ▶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장기화는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을 의미하므로 중국 진출 기업들의 대중국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대중국 전략과 글로벌 기업의 대응전략을 분석하여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대중전략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 중국정부 또한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국 경제산업 고도화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 중국은 향후 5년간 미국 견제에 대응하는 ‘쌍순환’ 전략하에서 첨단기술산업, 전략성 신흥산업, 현대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통해 외자 이용구조를 더욱 개선할 계획
- ▶ 미·중 경쟁 심화와 글로벌 기업의 유형별 대응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기업의 대중국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기업의 대중국 전략은 미·중 전략 경쟁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어떤 산업에 속하는지에 따라 △ 중국 사업 철수 및 해외이전 △ 미·중 간 공급망 분리 △ China+1 또는 N의 생산거점 다변화 △ ‘In China, For China’와 같은 중국 진출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중국 진출 글로벌 기업의 전략과 한국기업의 실태를 반영하여 △ 한국형 공급망 안정 및 업그레이드 종합전략 수립 △ 안정적인 대중 비즈니스 환경 조성 △ 미·중 전략 경쟁 관련 정보 플랫폼 구축 △ 중국 내 기업 지원기관의 역할 강화 △ 한국 내 글로벌 기업 유치 △ 동남아, 인도 내 생산 네트워크 구축 및 리쇼어링 지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세계화의 흐름 속에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빠르게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면서 세계 공장의 역할을 수행해옴.
  -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세계 주요국 글로벌 기업의 역할이 컸는데,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외자 유치 정책에 따라 중국에 대한 설비 투자를 확대해 왔음.
  - 중국정부는 중국의 시기별, 단계별 국가 발전 목표에 따라 국내 법과 제도를 개선해왔는데, 외자 유치 정책에도 이러한 변화가 반영됨.
  -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경제사회의 발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 내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 또는 대응해 왔음.
  
- 그러나 2018년 전후를 기점으로 중국 진출 글로벌 기업들은 거대한 도전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음.
  - 미국이 일부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중국 기술 및 공급망 견제를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논의가 시작되었고 글로벌 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됨.
  -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는 향후 어떠한 수준으로 발전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나, 대중국 견제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합의, 미국과 그 우방국가가 주도하는 가치 동맹(자유, 민주, 인권), 반도체·전기차·바이오의약·희토류 등 기술·공급망 동맹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장기화는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을 의미하므로 중국 진출 기업들의 대중국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진출 기업들은 큰 흐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국가전략 변화와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복합적이고 예상하기 어려운 환경하에 놓이게 되었음.
  -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대중국 전략과 글로벌 기업의 대응전략을 분석하여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대중 전략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글로벌 기업의 대중국 전략을 주요 분야별로 그 원인과 미·중 경쟁의 영향을 파악하여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조사 및 분석 결과

### 1) 중국 외자 유치정책의 변화

-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진출은 중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조정을 거치고 있음.
  - 미·중 갈등에 따라 자국 우선주의, 보호주의, 지역 블록화 등 거대한 도전에 직면
  - 동시에 중국정부 또한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국 경제산업 고도화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 중국정부는 14·5 계획 기간(2021~25년) 동안 안정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미·중 갈등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전략인 ‘쌍순환’ 전략을 발표
  -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국내·국제 순환’을 상호 촉진한다는 전략으로 대외 불안정에 대비한 내수 활성화 정책임.
  - 중국은 향후 5년간 첨단기술산업, 전략성 신흥산업, 현대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통해 외자 이용구조를 더욱 개선할 계획
    - 외국인 투자환경 최적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국가급 개발구의 역할을 확대하여 서비스 개방 확대의 선두 역할을 수행할 계획

표 1. 외국인 투자확대 조치

주요 조치	주요 내용
외국인 투자진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거티브 리스트 제한항목 감소를 통한 시장 진입장벽 완화</li> <li>- 업종별 진입절차의 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li> <li>- 외자 이용구조의 개선(첨단기술산업, 전략성 신흥산업, 현대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외국인 투자지역 분포와 투자주체 구조 개선</li> <li>- 중금 제조, 첨단기술, 전통 제조 혁신 및 업그레이드에 대한 투자 확대</li> </ul>
외국인 투자관리 체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투자관리 체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투자법 및 관련 조례의 전면적 추진</li> <li>▶ 외국인 투자 국가안전 심사제도 개선</li> </ul> </li> <li>- 외국인 투자제도 모니터링 및 사중 사후 감독 및 집행 체제 정비</li> </ul>
국가급 경제기술 개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 플랫폼(자유무역시험구, 자유 무역항, 서비스업 개방 종합 시범지구, 국가급 경제개발구)의 역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이징을 국가서비스 확대 개방 종합시범지구로 조성하고, 전국 서비스업 개방 확대에 선두 역할을 수행</li> <li>▶ 국가급 경제발전 구역의 혁신 업그레이드 추진</li> </ul> </li> </ul>
외국인 투자환경 최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정대우 보장</li> <li>- 외국인 투자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li> <li>- 서비스 보장 시스템 완비</li> <li>- 외국인 투자 서비스 전 과정 업그레이드</li> </ul>

자료: 중국 상무부(2021), 「“十四五”商务发展规划」, 「“十四五”利用外资发展规划」([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1-07/09/content\\_5623804.htm](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1-07/09/content_5623804.htm)) 참고하여 저자 정리.

- 중국정부는 외국인 투자규모 안정화 및 외자의 적극 활용을 위해 '제조업 분야 외국인투자 확대 정책' 및 '장려산업목록(2022)'을 발표
  - 2022년 10월 25일에 발표한 「제조업 분야 외국인투자 확대 정책(关于以制造业为重点促进外资扩增量稳存量提质量的若干政策措施)」<sup>1)</sup>은 미국이 견제하고 있는 의료, 반도체, 화학, 에너지 분야 외자 프로젝트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정책임.
  - 2022년 10월 28일 '장려산업목록(2022)'을 통해 제조업, 생산성 서비스업, 중서부 지역의 투자 장려 산업을 제시하였고, 고성능 소재 및 기계 분야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고성능 Al-Ti-B 결정립 미세화제, 정밀 전자 금형, 고순도(전자급) 폴리실리콘 소재 개발 등의 내용을 추가함.

표 2. 제조업 외자 유치 확대 정책의 주요 내용

방향	주요 내용
투자환경 최적화를 통한 외자 투자유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상 투자 가능 분야에 대한 개방 확대</li> <li>- 내국민대우 제공 및 법과 규정에 따른 지원 보장</li> <li>- 투자유치 활동 전개, 외상 투자기업·상회·국제기구와의 교류 강화</li> <li>- 국제 투자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제고, 중점 전시회를 통한 투자 촉진 서비스 기능 강화 → 의료, 반도체, 화학, 에너지 분야 투자유치 활동 전개</li> </ul>
투자 서비스 강화, 기존 외자 투자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비즈니스 인력(다국적 기업이나 외상 투자기업의 임원·기술 인력 및 가족)에 대한 왕래 편의 제공 → 출입국 절차 간소화(Fast Track) 지원</li> <li>- 원활한 화물 물류 운송 보장</li> <li>- 외상 투자기업에 대한 대출 등 금융지원 강화 → 주식시장(혁신, 창업판 포함) 상장 허용, 채권 발행 지원, 투자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지원 강화</li> <li>- 외상 투자기업의 이익 재투자 장려 →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li> <li>- 제조 분야 외상 투자기업의 무역·통관 등의 서비스 지원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기준 적용</li> </ul>
외자 투자구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자 투자구조 개선 → 선진 제조업 및 첨단장비, 기초 및 핵심부품 등 중점</li> <li>- 중국 내 R&amp;D 센터 설립 장려 및 과학기술 개방 협력 심화 → 스마트 제조 공장 건설 장려, 선진 제조 클러스터 건설 참여 지원 등</li> <li>- 외자 투자대상 저탄소 전환 분야로의 유도</li> <li>- 다국적기업의 중·서부 및 동북 지역 투자 추진</li> </ul>

자료: 오중혁(2022. 11. 3), 「중국, 제조업 분야의 외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발표」, csf 이슈분석, KIEP 동향세미나.

## 2) 중국의 FDI 현황 및 특징

- 중국이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는 3%에 불과했으나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6%를 넘어선 이후 2019년까지 6~9%대의 비중을 유지
  - 특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와 중국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감률 변화를 비교해보면 급락·상승이 크게 나타나는 전 세계 외국인투자 움직임과는 다르게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2019년까지 비교적 완만하고 안정적인 증가폭을 유지

1) 国家发展改革委(2022), 「国家发展改革委等部门印发《关于以制造业为重点促进外资扩增量稳存量提质量的若干政策措施》的通知」.

- 2018년 본격화된 미·중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2020년에 중국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은 전년보다 5.8%p 늘어난 15%를 기록

그림 1.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중(2000~20년)



자료: 商务部(2021), 「中国外资统计公报 2021」, p. 39; UNCTAD(2022), "World Investment Report 2022," p. 21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미·중 경쟁이 본격화된 2018년 전후의 미국, 유럽(독일),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 및 지역의 대중국 FDI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2014~17년 4년 평균치와 2018~21년 4년 평균치를 비교한 결과 대만을 제외한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는 대중국 투자가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

- 유럽은 2014~17년 평균 대중국 투자액이 79억 6,000만 달러에서 2018~21년 84억 6,000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한국도 41억 1,000만 달러에서 44억 7,000만 달러로 증가
- 일본, 미국, 독일 또한 각각 34억 7,000만 달러에서 37억 달러로, 23억 7,000만 달러에서 25억 4,000만 달러로, 19억 7,000만 달러에서 20억 9,000만 달러로 증가
- 반면 대만의 경우 18억 2,000만 달러에서 12억 3,000만 달러로 크게 감소

표 3. 2018년 전후 주요 국가·지역의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 비교

(단위: 억 달러)

국가·지역	유럽		한국	일본	미국	대만
		(독일)				
2014~17년 평균치	79.6	19.7	41.1	34.7	23.7	18.2
2018~21년 평균치	84.6	20.9	44.7	37.0	25.4	<b>12.3</b>
2019~21년 평균치	<b>75.5</b>	<b>15.6</b>	44.0	36.7	24.9	11.7

자료: WIND의 주요 국가 및 지역별 실제 이용 외상투자액을 활용하여 저자 계산.

-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 분포를 살펴보면 3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
  - 반면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제2차 산업에 대한 외자 유입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2020~21년에는 25%를 하회함.
  -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7년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의 업종 분포와 2020년의 분포를 비교해보면 제조업 투자 비중은 크게 줄어든 반면 과학연구 및 기술 서비스업과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투자 비중이 두드러지게 확대됨.

### 3) 미·중 경쟁 심화와 글로벌 기업의 유형별 대응 사례

- [유형 1) 미·중 공급망 디커플링: 반도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견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TSMC는 미·중 간 공급망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특히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과 디커플링을 추진
  - TSMC는 2029년까지 12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 5nm 공정기술을 활용한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대만 내에는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계획
  - TSMC는 미·중 전략 경쟁에 대응하여 최첨단, 첨단, 레가시 반도체 생산기지를 각각 대만, 미국, 중국으로 분리하여 미·중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중국시장 판매와 대만 경제안보 확보를 모두 고려하는 전략을 추진

표 4. 대만 TSMC 파운드리 Fab 구축 현황

국내			국외		
12인치 웨이퍼	8인치 웨이퍼	6인치 웨이퍼	Backend Fab	12인치 웨이퍼	8인치 웨이퍼
신주 과학단지 (본사 및 R&D 센터) (Fab 12A & Fab 12B)	신주 과학단지 (Fab 3)	신주 과학단지 (Fab 2)	신주 과학단지 (Advanced Backend Fab 1)	TSMC Nanjing Pukou 경제개발구 (중국 난징) (Fab 16) (기존 16nm, 28nm 증설)	TSMC China (중국 상하이) (Fab 10)
타이난 과학단지 (Fab 14)	신주 과학단지 (Fab 5)	신주 과학단지 (Fab 2)	타이난 과학단지 (Advanced Backend Fab 2)	-	Wafer Tech (미국 워싱턴) (Fab 11)
중부 과학단지 (타이중) (Fab 15)	타이난 과학단지 (Fab 6)	-	타오위안시 (Advanced Backend Fab 3)	-	-
타이난 과학단지 (Fab 18) (3nm & 5nm)	신주 과학단지 (Fab 8)	-	중부 과학단지 (타이중) (Advanced Backend Fab 4)	-	-

자료: TSMC 홈페이지, [https://www.tsmc.com/english/aboutTSMC/TSMC\\_Fabs](https://www.tsmc.com/english/aboutTSMC/TSMC_Fabs)(검색일: 2022. 9. 1).

- [유형 2) 생산거점 다변화: 동남아·인도 이전, 리쇼어링] 2018년 이후 악화되고 있는 미·중 관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이동 제한 등으로 일부 글로벌 기업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 아이폰 부품 공급사로 분류되는 약 70여 개의 미국계 기업은 상하이 인근 장쑤성(江蘇省) 쿤산(昆山), 쑤저우(蘇州) 등에 생산 공장이 소재하는데,<sup>2)</sup> 그중 48개의 공급사는 일부 사업장을 미국으로 이전하기도 함.
  - 미·중 마찰이 본격 진행되면서 페가트론(和碩), 콰타컴퓨터(廣達電腦), 인벤틱(英業達), 위스트론(緯創), 컴팔(仁寶) 등 5대 대만 전자기기 OEM 기업은 생산 라인을 중국으로부터 동남아, 미국, 인도, 멕시코, 대만 등 지역으로 확충하거나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표 5. 중국 진출 대만 전자기기 OEM 기업의 대응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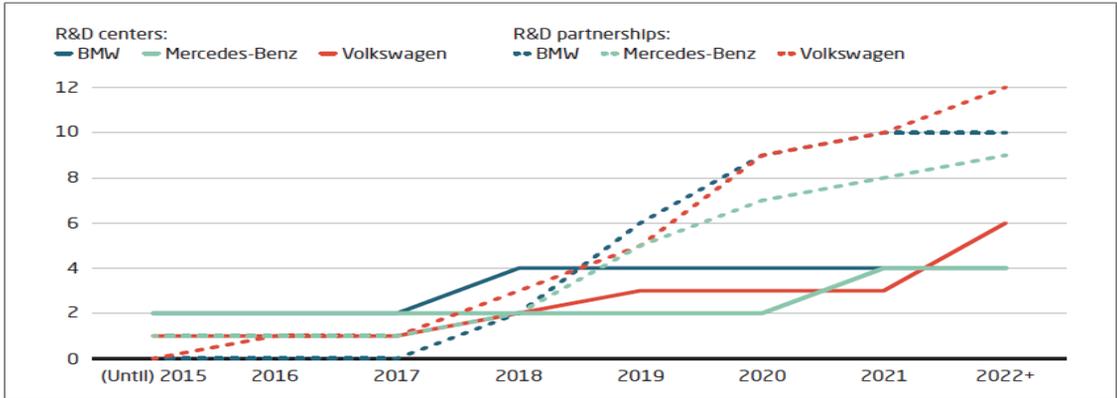
회사명	이동 지역	내용
페가트론	인도네시아, 대만	약 93억 NTD를 투자해 인도네시아에 생산기지 확충, 이르면 2019년 4월부터 정식 가동 계획, 더불어 관세 부과로 인한 비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
컴팔	대만, 베트남	약 60억 NTD(한화 약 2천억 원)를 투자해 공장을 대만, 베트남까지 확충 추진
인벤틱	대만	약 60억 NTD를 투자해 대만 타오위안(桃園) 공장 확충, 향후 대만, 동남아, 멕시코에서 생산할 계획
콰타	대만	50억~60억 NTD를 투자해 타오위안에 1만 평 규모의 공장용지를 매입하여 생산 라인 확대
위스트론	인도	향후 5년간 216억 NTD를 투입해 인도에 생산 라인을 설립할 계획이며, 인도정부가 약 43억 2,000만 NTD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

자료: CENS(2019), 「避開大陸 電子代工五雄大擴產」, [https://www.cens.com/cens/html/zh/news/news\\_inner\\_52599.htm](https://www.cens.com/cens/html/zh/news/news_inner_52599.htm);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2019), 「(경제동향) 리쇼어링 등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당지 영향 관련」, [https://overseas.mofa.go.kr/tw-ko/brd/m\\_1458/view.do?seq=134654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6](https://overseas.mofa.go.kr/tw-ko/brd/m_1458/view.do?seq=134654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6)(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2. 9. 1).

- [유형 3) 중국 진출 확대: In China, For China] 미·중 전략 경쟁 심화에 따라 중국을 떠나 공급망을 재편하는 사례도 있지만, 중국시장 수요가 크고 중국정부가 외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오히려 중국 내 진출을 확대하려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음.
  - 글로벌 기업들은 과거 중국을 글로벌 생산기지로 활용하려던 것에서 벗어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고 선점하기 위해 중국 공급망 편입·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미국 테슬라사, 일본 및 독일 자동차업체 등 범용 반도체와 전기차 분야에서 이러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생산기지 이외에도 R&D 센터를 구축하여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2) Financial Times(2022. 4. 28), "Half of Apple suppliers operating in China's lockdown-hit areas," <https://www.ft.com/content/c347e598-588b-4f0b-9044-54badc8f328b>(검색일: 2022. 10. 11).

그림 2. 독일 자동차회사의 중국 R&D 투자 동향



자료: Merics(2022. 10. 27), "The bumpy road ahead in China for Germany's carmakers," p. 7.

### 3. 정책 제언

- 글로벌 기업의 대중국 전략 유형별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기업들은 기업의 특징과 비교우위에 따라 대중국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미·중 전략 경쟁은 현재까지 중국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으나 향후 대중국 전체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다양한 수단과 조치가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표 6. 글로벌 기업의 대중국 전략 및 미·중 전략 경쟁 영향

대중국 전략 유형	주요 분야	원인	미·중 전략경쟁 영향
중국사업 철수 및 해외이전	노동집약적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원가 상승</li> <li>중국 로컬 업체 경쟁력 제고</li> <li>중국 내 판매 부진</li> <li>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철수 및 해외이전 가속화</li> </ul>
미·중 공급망 디커플링	최첨단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의 대중국 기술 견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시장 또는 기술 의존도가 높은 분야로 중국 내 사업 철수 불가피</li> <li>계획되어 있는 대중국 투자 취소 또는 유보</li> </ul>
생산거점 다변화	중국 공급망·시장 의존도가 높은 첨단 제품(전자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내수시장 판매 확대</li> <li>미·중 갈등, 중국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시행 등 중국 공급망 리스크 대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hina+1 or N: 중국사업 지속과 동시에 중국 외 지역에 생산기지 추가 건설</li> <li>일본·대만 등 리쇼어링</li> </ul>
중국시장을 위한 중국 내 공급망 강화	전기차, 첨단 부품 및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시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서 시장 선점</li> <li>중국 제조업 고도화에 따른 수요 확대</li> <li>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비하기 위해 'in China, for China'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 공급망 편입</li> <li>중국 내 R&amp;D 투자 확대</li> </ul>

자료: 분석 내용을 근거로 저자 정리.

- **글로벌 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 및 회복력 강화에,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산업과 기술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둔 한국형 공급망 안정 및 업그레이드 종합전략 수립 필요**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대중국 전략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요 국가는 단순히 미·중 전략 경쟁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을 넘어 글로벌 질서 변화에 대한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한국이 제조강국이자 무역강국임을 감안할 때,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최우선 순위는 공급망 안정과 업그레이드에 있음.
    -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 및 회복력 강화에,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산업과 기술에 있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야 함.
  - 한국의 대외정책,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인재육성정책을 아우르는 공급망 안보와 업그레이드 종합 전략 수립이 시급
    - 시장주의를 표방했던 미국, 유럽 등 국가도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반도체, 슈퍼컴퓨터,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우주항공부터 AI, 6G, 디지털 플랫폼 등 미래 성장산업과 관련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인재양성에 국가의 총역량을 결집해야 함.
  
- **한·중 간 생산 네트워크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한·중 공급망 안정 채널, 미·중 경쟁 정보 플랫폼 구축, 중국 내 한국기업 지원기관 역량 강화 등 안정적인 대중 비즈니스 환경 조성 필요**
  - 자체 설문조사 결과, 미·중 전략 경쟁이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중국사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제고하고 있음.
    - 한·중 간 생산 네트워크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대중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축소할 수 있는 외교적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우리의 의사결정 여력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미·중 간 균형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음.
    - 미국과 중국 모두 공급망 안정에 있어 한국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한국은 미·중 양국 모두와 협력을 강화하여 전략적 위상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미국과는 첨단 분야에서 공급망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보호주의적 행위로 인하여 우리의 국익에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간 또는 민간 협의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IPEF, Fab4와 같은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 협의체에도 참여하여 우리 기업의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도록 해야 함.
  - 중국과는 글로벌 다자통상 질서와 자유무역 질서를 수호한다는 데 같은 입장이지만,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한·중 간 경제협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보조금 지급,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비관세 장벽 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국정부와 협력하여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공동부유 등과 같은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는지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여 중국정부의 정책 리스크를 해소해야 함.
- 이러한 정책 추진에 있어 우리의 우려사항을 중국정부에 전달하고, 외자기업이 중국 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도록 정책의 지속성, 예측 가능성, 안정성 제고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 **최첨단 반도체 분야와 같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한 분야에서 글로벌 우수 기업의 국내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한국 내 혁신 생태계 구축 도모**

- 미·중 갈등으로 인해 미·중 간 디커플링이 불가피한 분야가 첨단 반도체 분야임.
- 미국 반도체 업체들은 대중국 투자를 유보하거나 인력을 재조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아시아에 생산거점을 구축하고자 하는 글로벌 반도체 업체의 유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미국과의 신뢰관계, 반도체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인접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 고객사 보유 등의 이점을 갖고 있는바, AMAT, 미국 램리서치, 일본 도쿄일렉트론(TEL), 네덜란드 ASML 등 세계 4대 반도체 장비기업과 협력하여 한국 내 반도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진출 기업에 유용한 미·중 전략 경쟁의 동향 정보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므로 미·중 전략 경쟁 관련 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 노력 필요**

- 설문응답 업체들이 요청한 정부 지원사항은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요구가 적지 않음.
- 2022년 2월 산업부가 한국무역협회, 코트라와 공동으로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심층분석과 함께 정부·민간의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음.
  - 이를 기반으로 미·중 전략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제안보와 관련된 정보 플랫폼 구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적시에 미·중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대중국 사업을 진행할 때 미·중 갈등 요인은 상수로 간주하고 사업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대중국 견제 법안과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새로운 논의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여 중국정부도 유사한 법·제도를 제정하고 있는데, 중국 진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미·중의 법률 자문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자체 대응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 정보 제공과 자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KIEP**